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39
----------	------

발의연월일 : 2024. 9. 13.

발 의 자 : 이상식 · 이기현 · 김문수
조인철 · 조정식 · 윤준병
임호선 · 황운하 · 모경중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조약·국제협정에 규정이 필요해졌음.

특히 긴급공조사안,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시 인터폴 등 치안공조 체제 및 각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국제공조도 중요해진 만큼 개인정보 민감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8조의 4 신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이전)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의3에 따른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 등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이전)</u></p> <p><u>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의3에 따른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 등 이 전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범위, 절차 및 보안대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